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Danny Leipziger

수십 년간 한국의 경험을 검토하고 혜택을 받아온 본인으로서 세계은행에서의 경력을 쌓는데 한국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오늘은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인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부각시키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대공황이래 세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2009년에 8.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이는 세계 다른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010년 1/4분기에는 연율로 환산하여 12%로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두 자릿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열의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경제위기 기간 중에 중국의 경제성장 구성비가 변화하였으며, 이는 부진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재정부문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수요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주택가격은 전국이 거의 12%, 36개 주요도시는 32%로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 우려할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부터 환율은 달러에 다시 고정되어 왔다. 그 이전 몇 분기에 걸쳐 약간의 절상이 있었는데, 중국 당국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더 이상의 지속적 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낀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매우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중국경제의 외형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초에 중국의 수출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교과서에 나오는 V자형 회복을 경험한 국가가 매우 드물다. 동시에 무역흑자도 GDP대비 10% 근접한 높은 수치에서 2009년에는 5%로 하락하였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불균형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5% 흑자도 여전히 높으며 그리 좋은 소식이 못 된다는 것이다. 무역흑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2.5조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 이 글은 2010년 5월 18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대 초 40%에서 정부투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2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China: Main Economic Indicators						
(percent ch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2006	2007	2008	2009	2010 f	2011 f
The real economy						
Real GDP	11.6	12.9	9.6	8.7	9.5	8.7
Domestic demand 1/	9.7	10.7	9.4	13.8	9.7	8.6
Consumption 1/	8.4	10.1	8.8	9.7	9.6	9.1
Gross capital formation 1/	11.1	11.4	10.2	18.3	9.7	8.2
Contribution to GDP growth (pp)						
Domestic demand 1/	9.4	10.4	8.8	12.7	9.1	8.3
Net exports 1/	2.2	2.6	0.8	-3.9	0.4	0.5
Contribution net exports (WB, pp) 2/	3.8	3.4	1.8	-4.8	0.4	0.5
Exports (goods and services) 2/	23.8	19.9	8.6	-10.6	14.7	9.4
Imports (goods and services) 2/	15.9	14.1	5.1	3.9	16.4	9.2
Potential GDP growth	10.5	10.4	10.1	10.4	9.3	8.7
Output gap (pp)	0.0	2.5	2.1	0.4	0.6	0.6
CPI increases (period average) (%)	1.5	4.8	5.9	-0.8	3.7	2.8
GDP deflator	3.6	7.5	11.4	-2.1	2.7	2.6
External terms of trade	-0.8	-0.9	-4.3	8.6	-2.9	-0.1
Fiscal accounts (percent of GDP)						
Budget balance 3/	-0.8	0.6	-0.4	-2.8	-2.8	...
Revenues	18.3	19.9	19.5	20.6	19.6	...
Expenditures	19.1	19.3	19.9	23.4	22.4	...
External account (US\$ billions)						
Current account balance (US\$ bln)	250	372	426	284	304	341
As share of GDP (%)	9.4	11.0	9.4	5.8	5.5	5.4
Foreign exchange reserves (US\$ bln)	1066	1528	1950	2400	2818	3289
Other						
Broad money growth (M2), e-o-p (%)	16.9	16.7	17.8	27.0	17.0	...

Sources: NBS, PBC, Ministry of Finance, and staff estimates.

1/ WB estimations using data on contribution to growth (Table 2-20 in China Statistical Yearbook).

2/ WB staff estimates based on trade data for goods from the Custom Administration, adjusted for estimated difference in price development for services trade.

3/ For 2009 and 2010 this is the commitment data presented to the N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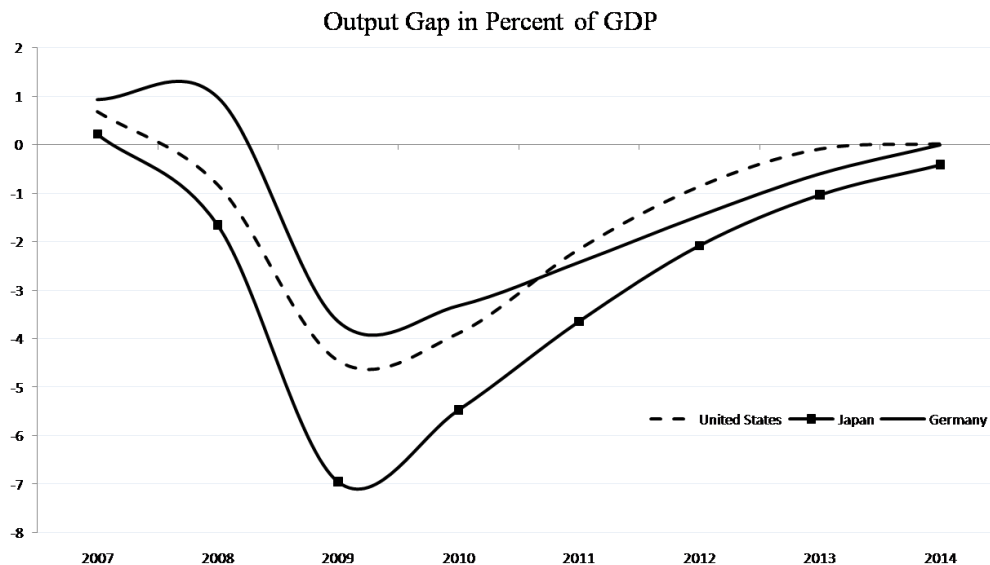
<그림 1>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 즉, output(또는 GDP) 갭의 계산을 표시한 항목이다. 내가 잠재성장률 계산을 특별히 신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근무 하던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IMF가 산출해내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계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불변적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요소들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09년이나 2010년, 그리고 2011년의 예측치에서도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상태로 가동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하면 output 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고 얼마 동안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향후 몇 년간의 중국을 솔직하게 평가해보면 긍정적인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전세계 수출이 회복되었고, 소비가 안정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경기부양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양책 규모는 GDP의 6%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만 정부재정통계에 잡히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부양책의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고 은행부문을 통하여 집행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중국의 주요 골치거리이며, 환율을 실세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초기에 실업이 다소 증가했지만 경기부양조치(주로 수출감소를 대체하는 정부의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인플레 기대심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2010년 초 두 자릿수 성장과 주택가격상승을 보면 인플레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중국이 아니었다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인플레 대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통화긴축과 환율절상이 인플레 기대를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잠재성장보다 5% 낮게 가동되는 동안 중국은 거의 잠재성장애 가까운 성장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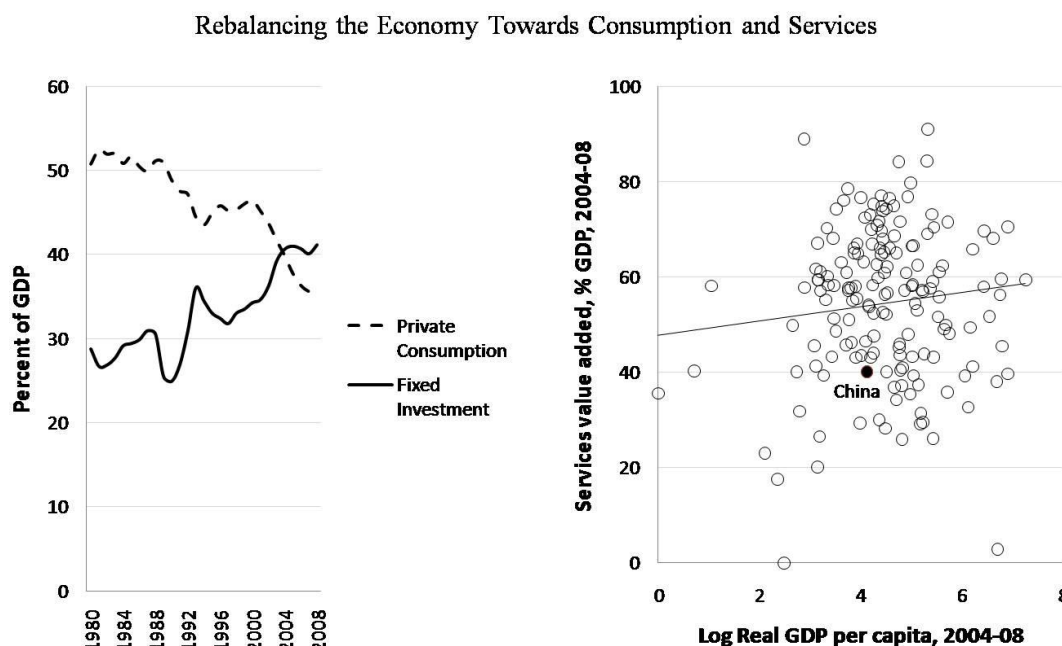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2>는 미국, 일본과 독일의 잠재성장률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모든 주요 경제대국은 2014년에나 잠재성장률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1~2% 포인트 아래로 좀더 근접하겠지만 잠재성장률에 거의 근접하여 운영되는 중국경제와는 대조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국의 수요를 기대해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3>



<그림 3>의 왼쪽 그래프는 지난 25년간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대체로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비가 하락하고 고정투자가 증가하였다. 2008년~2010년 중국의 소비추세는 대체로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은 뚜렷하게 하락하였으며, 총수요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지출에 채워지고 있다. 우측은 로그(log)화된 GDP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중국의 서비스부문이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100개 국가들 중에 중국은 현저히 추세선 아래에 속하고 있다.

또 하나의 불균형이라고 한다면 국내총생산의 지역적 분포이다. 아무도 성장축이나 성장의 중심지가 없어야 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림 4>에서 지역별 원의 크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GDP가 연안지역에서 산출되고 있다. 중국관계 종사자들에게는 뉴스거리가 아니겠지만, 이 전국지도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써 중국이 당면한 많은 경제전환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게 한다. 첫째로, 수억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농촌지역에서 연안지역으

로 이동하고 있다. 시골과 도시간, 그리고 주요 성장축과 빈곤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단기적 경제운영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림 4>



2010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2009년에 중단된 모든 조치들을 끝낸 이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가능한 한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측면에서 보면 재정부양 규모의 수치가 비록 5.8%을 나타내고 있지만 재정적자는 이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아무튼 재정측면에서의 엄청난 노력을 금융완화가 뒷받침하고 있다. 2009년에 신용규모가 30% 증가한 것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Greenspan조차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중국당국은 금년도 신용팽창이 18% 정도가 될 것이라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신용증가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 은행의 지급률을 높인다든지 두 주택 또는 세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교과서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금융긴축이 예상된다. 동시에 재정기조도 안정적인 것이며, 지방정부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나 정부재정 적자는 통제가능 범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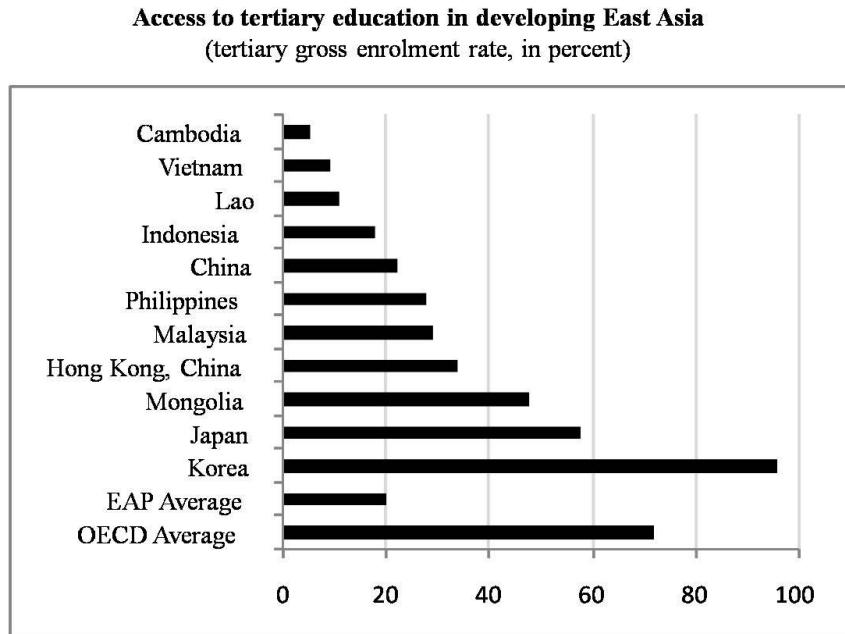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를 담보 또는 매각하거나 지방은행 차입을 통하여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적자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금리가 낮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수면에 나타난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 밖에 안 된다고 하나, 전세계가 깊은 불황에서 회복하려는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5%도 문제이다. 유로존(Eurozone)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율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유럽국가 중에서도 독일처럼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는 나라가 있다. 유로존 내에서도 어떤 국가의 대규모 흑자는 다른 국가들의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정부문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쌍둥이적자(미국을 이번 불황에 빠뜨린)는 문제가 된다. 중기적으로 중국의 과제는 균형을 되찾는 것이며, 인플레이 기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내소비를 통하여 성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9~10% 성장을 하면서도 주택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인플레이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도 인플레이 압력이 계속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중기과제는 지역간 불평등인데, 이 문제는 일자리, 인구이동, 혼잡 그리고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조화(harmony)는 11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목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은 대규모의 불평등이 있는 한 조화로운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장회계에서 도출해낸 과제는 특히 엄청나게 증가하는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인 것으로 생각된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과제이다. 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부문보다는 제조업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중국이 한국보다 수십 년 뒤져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대규모 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낮은 총요소생산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경제적 복지의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금은 그러한 욕구를 억압할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OECD 국가들이나 여타의 국가에서처럼 경제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이나 복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개념들이다. 나는 중국인들이 이러한 압력에 면역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동시에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점감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어느 부문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배운 바가 많다. Akerlof와 Schiller가 쓴 *Animal Spirits*라는 책(프린스턴대 출판부, 2009년 발간)에 의하면, 시장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수백 년 간의 경제적 사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기겠다.

중국을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다. <그림 5>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등교육 비율을 나타내는데,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5>



나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한국과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비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빙상경기에서처럼 다른 국가들을 앞서 간다.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나는 기술혁신의 척도로써 특허 건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이 특허권과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중국이나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데, 이 방면에서 중국은 평균보다 뒤져있다. 중국이 왜 기술을 갈구하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모든 R&D와 기술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에 한국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 역지사지로, 한국의 추격을 받던 일본의 느낌을 이제는 한국이 이해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즉각적인 대답이었다.

이제는 장기과제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서비스경제에 매우 중요한 교육부문에서 크게 뒤져있다. 서비스경제의 높은 생산성은 그쳐

럼 낮은 고등교육 수준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의료보건도 이슈가 되고 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병원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병원에서 조제하는 약품의 수를 주요변수로 해서 산출되는 공식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거기에 어떤 수를 곱하여 병원에 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보건행정에 있어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며(제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이 높지 않다.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혁신분야에서는 뒤쳐져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계획이 좋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상해에 가보면 앞으로 5~10년 후에 건설될 시가지의 모습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분명히 중국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물론 재원이 제대로 조달되면 신도시나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며, 목표수익률이나 자본비용 같은 번거로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솔직한 평가는 중국이 매우 효과적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증가가 정지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 뉴스에 일본인들이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도된 적이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로봇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다. 아무튼 한 자녀 정책이든 자연스런 경제성장 과정이든 간에 중국의 인구피라미드는 변하고 있다. 작은 비중의 인구가 더 큰 비중의 인구를 부양하게 될 것이다.

연금제도도 표준에 미달하고 있다. 연금의 이동성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의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때 연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이슈들이다. 앞에서 나는 기후변화가 장기적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별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알아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정화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미루기 보다는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중국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환율문제에 있어서 나는

중국에게 프리패스(free pass)가 주어졌다고 느끼는 편이다. 그러나 그 프리패스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2009년에 유럽의 지도자들이나 IMF 총재, 그리고 많은 인사들이 중국의 환율이 균형을 벗어났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경제 정책 이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율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점진적인 절상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첫째로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될 것이고, 둘째로 국내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중국경제의 이익에 부합한다. 분명히 중국은 환율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나는 보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가 환율절상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인플레이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나는 세계경제를 새로운 참여자(중국)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주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세계 GDP가 60조 달러지만 중국의 GDP는 4.2조 달러 수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14조 달러와도 비교가 된다. 비록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원수요, 막대한 외환보유고, 고탄소 경제구조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하지만, 4 대 60(경제규모에서)의 비율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금년 말이 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8조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1인당 소득이 4,000달러인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중국인들이 1인당 2,000달러(1년치 소득의 절반)를 중앙은행에 묻어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만약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본다면(그럴 리도 없겠지만), 나는 중국 국민들이 그 돈 중 상당부분을 털어서 쓰는 쪽을 지지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험에서 중국이 배울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중국은 환율이 국가 경제정책의 많은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한국도 늘 환율의 경쟁력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경제정책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망각할 정도로 환율을 정상궤도에서 이탈시키지는 않았다. 둘째로 소비를 선호하는 보다 균형적인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강화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처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한국이 어떻게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는 ‘신용카드’라는 한 마디로 대답한다. 명동 주변을 조금만 걸어봐도 변화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다. 좀 더 진지하게 말해서, 중국의 국민들이 주택투기를 뛰어넘는 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장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부문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지 않고 환율도 변동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거래가 자유화

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금융규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서비스부문의 중요성은 교육과 지식기반경제를 부각시킨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정부 부처의 이름을 다시 작명할 정도로 분명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서, 또 전략적 경쟁국으로서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업분야나 기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내가 중국에서의 합작사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읽어 본 바에 의하면, 이익을 많이 냈다는 합작기업의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발판을 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기업들의 성과도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견해로는 기술이 핵심적인 경쟁력 결정요소이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미래산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에 한국은 중화학공업 투자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종적인 성패는 반반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금의 대기업들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산업정책이 아직도 존재하나, 다행스럽게도 산업정책이 금융산업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지는 않고 있다. 신용보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기업 간에는 미래에 경쟁력 있는 기술기반 산업을 찾아내는 흥미롭고 생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며, 올바르게 집행된다면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유로지역, 중국을 3대 축으로 하는 한국의 수출정책은 바람직하고 성공적이었다. 지난 2년 동안 (2008~2009년) 적어도 3대 시장 중 하나는 잘 유지되어 한국의 V자형 회복에 기여했다.

나의 상관인 세계은행 총재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세계는 어떻게 양극 체제(G-2)가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세계은행 총재는 그 논문을 쓰기 전에 나에게 물어 본 바 없었고 내가 얘기했어도 듣지 않았겠지만, 그의 견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중국이 아직 신흥국가이며 경제운용목표도 OECD 국가들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은 아직 대등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만약 공공수요가 분출되도록 허용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하지 않았던 많은 정책들의 상쇄효과와 더불어 불편이 현재화될 것이다. 최근의 구글(Google) 사태나 지적재산권 보호,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처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Doing Business의 조사내용

을 보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다. 중국의 우선적 고려대상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 나의 마지막 주제인 앞으로의 세계화 속도로 넘어가겠다.

한덕수 등 세계 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내가 함께 참여한 Growth Commission의 마지막 보고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2008년 5월에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으며, 두 번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0월에 발간되었다. 각 보고서들은 경제성장의 주요동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입안자들이 성장동력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석 마지막 단계의 일환으로, 앞으로 세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등의 저명한 간행물에 단골로 기고하는 인사들과 수 차례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몇 개의 논문이 Michael Spence 교수와 내가 출판한 이 책에 편철되어 있다. 내 견해로는 볼 때, 앞으로 몇 년간 전세계의 성장률이 낮아져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일자리, 분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다. 개방적 무역체제의 약속이 여러 나라들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처럼 국내실업률이 높고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진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5년간 연속 소득분배가 악화되었고, 부의 분배는 편차가 더 심화되었으며, 일반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1990년 초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이 세계화의 장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 산업정책은 정치경제학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만연 될 것이다.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새로운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Dani Rodrik 등 일부 인사들은 산업정책이 잘만 집행되면 무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시계추가 그 쪽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산업정책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이 통제되고 보조적 금리가 적용되는 산업정책과, 전기차와 같은 훌륭한 아이디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R&D 비용을 정부가 대는 것(리스크는 기업이 감내하는 사업제휴 방식으로)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서 전기차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게 된다. 아무튼 지금의 산업정책은 10~20년 전처럼 나쁜 뜻의 용어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있다. 그러한 사례 중 대다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며, 잘 알려지지지는 않았으나 유럽국가들도 일부 있다. 핀란드가 매우 강력한 산업정책을 채택해

왔으며, 산업정책이 과학과 기술영역에 국한되고 잘 짜여지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시계추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낙관적으로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견해를 말하겠다. 나는 위기관리가 부양책이나 금융정책의 측면에서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대로 시행되었던 위기관리가 V자형 회복을 이끌어 오고 있다. 도입된 양적 금융완화정책은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녹색성장정책(green growth agenda)은 경기부양책의 훌륭한 방안이었다는 것이 나의 평가이다.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큰 이슈는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국의 녹색기술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내가 George Washington 대학의 MBA과정 학생 20명을 인솔하여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책이 재정적 부양책과 미래정책이 잘 결합되었다고 평가하는데, 특히 녹색기술이 수출유망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A 학점을 받았으며, 중기적으로도 매우 현명하게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인 부분은 잠재성장률 계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위기 이전에 IMF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특히 동아시아의 기준을 볼 때, 장기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 전쯤 동료와 함께 그 추정치를 재검토해보았더니¹, 세가지 요소가 한국의 장기적 잠재성장률 저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발견하였다. 현저하다(significant)는 것은 모든 조치를 다할 경우 모델에서 2% 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첫 번째 요소는 은퇴연령이다. 인구구조로 본 한국의 평균수명을 80세로 가정하면, 55세 은퇴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의 비용을 25년 동안 다른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규모를 볼 때 이는 큰 문제이다. 둘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아주 미흡하다. 일본보다 낮고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지금은 여성들이 손쉬운 하위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아직 재무부나 무역관련 부처의 차관이 여성인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해결해야 할 여타 사회적 이슈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한국이 로봇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끝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재조정을 해보았

¹ Ianchovichina, Elina and Danny Leipziger (2008). How can Korea Raise its Future Potential Growth Rate? *World Economics*. Vol. 9 No. 4. October – December 2008.

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였으며, 은퇴연령을 55세에서 62세로 변경시켰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훨씬 더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G-20을 통하여 세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일회성의 지도적 지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G-20 내의 모든 국가들이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국은 분명히 자격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중국보다는 한국을 더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시장은 훨씬 작지만 예측가능하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의 · 응답

질문 중국의 부양정책 규모가 6%이나 대차대조표에서는 약 3%만 나타난다고 언급했는데 이들 두 수치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한 2009년도에 중국의 여신이 30% 증가했다고 하였으나 당시 중국은 이미 신용긴축 정책을 쓰고 있었다. 금융긴축 기조 하에서 어떻게 30%의 여신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가? 끝으로 산업정책이 옛날로 복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식회사 일본’으로 유명한 일본도 국가 전체가 산업정책의 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산업정책에서 완전히 빠져 나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택분야에서 산업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세계화에 대한 장기적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답변 순서를 바꾸어 답변을 하겠다.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실패한 개입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어떻게 짜이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R&D 측면에 대해서만 긍정적 평가를 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업정책이 긍정적 목적으로 도입되어도 다른 여러 부문이 잘못되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주택부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 미국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를 질문자는 산업정책으로 정의하였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Taylor rule이나 여타의 객관적 척도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미국의 주택정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산업정책의 성패는

보완적인 정책환경에 달려있다고 답하겠다. 나는 미국 정부가 통화정책이나 감독정책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성장의 함정에 빠뜨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금융긴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신용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수단을 통하여 긴축하는 정책을 병행한 것으로 믿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중국이 모든 제동을 풀었다는 느낌을 나는 받았으며, 중국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완전가동하면서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고삐를 조이려 했지만 신용공급 자체는 줄이지 않았다. 당시에 국제적 신용이 말라버렸고 2008년에는 한국도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자 브라질은 국립은행을 통하여 많은 돈을 풀었다. 나는 전반적인 신용완화와 주택부문의 억제를 구분하고자 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할만큼 알지 못한다. 내가 관여한 보고서에는 재정부양책 규모가 적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언급되었다.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세부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럽과 다르게 대처했음은 분명하다. 재정수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부양책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다.

질문 중국의 미래 정치체제는 어떤 형태가 되겠는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시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예측이 있다. 경제개발과, 독재 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이행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양쪽 모두 성공하였다.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정치체제에 도전할 정도로 강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만큼, 중국이 지금의 일당독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민주체제로 전환될지 여부가 궁금하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많은 갈등을 유발할 터인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경제학자로서 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더 나은 생활과 더 많은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높아져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경제발전과 반드시 1차 함수관계는 아닐 것이다. 저(低)개발단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존(subsistence)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더 지배적 관심사이다. 다른 문제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주의가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로서는 어떤 체제가 등장한다고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중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중국이 닮고 싶어하지 않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패거리 자본가(crony capitalists)를 양성하는 러시아 모델이다. 베트남은 아직도 일당국가이면서 시장이 더 개방되어

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는 것은 민주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추월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당국가체제 상황에 있을 때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원하는 바대로 정치체제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가장 잘 해낸 국가가 싱가포르이다. 비록 작은 섬나라 경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일당체제 국가였던 싱가포르는 실적주의를 강화했고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잘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이루어내는 것과 중국에서 이루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겠다.

질문 몇 년 전에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GDP대비 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혹자는 부실채권이 GDP의 30%에 이른다고 얘기했다. 그러한 논란이 최근에는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강연에도 중국의 은행부실 채권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것인가?

답변 내가 1990년대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국영기업과 부실채권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감독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 수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부실채권 규모가 GDP의 30%에 근접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문제가 작아졌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신용공급이 풍부하고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많은 문제가 숨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비록 부실채권이 10% 수준이라 하더라도 신용이 풍부한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경제에서든지 금리가 상승해서 사람들이 상환할 수 없게 되면 부실채권 문제는 다시 등장하게 된다. 나는 국영기업의 아킬레스건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5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구제조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전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질문 사람들은 중국이 환경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정반대의 얘기도 있다. 환경문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강제된 규범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환경문제를 매우 우려한다고 한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기부양책들의 대부분은 비효율적이기로 소

문이 나있다.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산적인 성과가 있었나?

답변 경기부양정책은 이미 계획된 인프라 구축에 투자됨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면밀히 사전에 조사되어 집행만 하면 효과가 가속화할 수 있는 투자거리가 없는 것이 미국과 같이 비(非)계획경제국가의 문제 중 하나이다. 중국은 계획경제 메커니즘 덕택에 양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것이 내 느낌이다. 교량을 도색한다든지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어느 정도 다 하는 일인데, 이와는 달리 중국은 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중국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3~4년 전만 해도 매주 하나 꼴로 매연덩어리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던 중국 정부에게는, 전 세계적인 외부경제효과 문제의 전형적 해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250백만 달러 규모의 매연발전소이든 350백만 달러 규모의 청정발전소이든 차이가 없었다. 곤혹스러운 것은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GDP의 8%, 9%의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현 시대 미증유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해서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국제사회의 간섭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그랬다는 말이다. 내가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지난 2년간 달라졌음을 느낀다. 중국도 기후변화 대처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시작한 것 같다. 250백만 달러 규모의 발전소가 지금의 계산으로는 경제적이지만 정화비용, 국민의 기대수명 감소, 보건문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지금 개량된 발전소를 짓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 생각에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 같다

질문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20~40% 저(低)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환율문제를 양국간의 파워게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언제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겠는가?

답변 분명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평가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저평가된 환율을 변형된 보호주의의 형태로 보는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평가된 환율이 20% 관세와 맞먹는다는 계산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40%는 약간 높은 수치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20%라고 하자. 환율결정 메커니즘이 고장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입지가 약화되었다. 나의 사건으로는, 중국이 미국 달러화 채권을 덤핑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불균형문제에 사로잡혀있고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교사(咬使)했다. 불균형은 공급과 수요의 양면성이 있다. 중국이 환율로 보조해온 것은 미국의 과잉소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방정식에서는 도덕적 우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의 기후변화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비용편익 분석은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는 중국이 비교적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군을 유지할 수 있는 한 환율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율절상은 훌륭한 인플레이 대책이며, 국내소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수요곡선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고통 없이 환율을 10% 절상 가능하다는 말을 만약 중국의 정책입안자가 듣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소비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의 경제구조 재조정함에 있어서, 국내고용을 충분히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수출이 유일한 동력이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국내부문에서 고용을 약간 늘리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인건비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이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면 환율도 그만큼 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 얼마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 환율이 절상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중국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가까운 장래에 중국은 자본거래 통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답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이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자본시장 개방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즉 모든 국가가 자본계정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규제당국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였고 중국도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한다. 최근 Financial Times에서의 토론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본통제나 통화의 불태환성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브라질이 자본유입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논란이 많았다. 실제로 나는 Financial Times에 반대하는 답변서를 보냈으며, 세금이 브라질 통화의 절상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금은 국내금리를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누구나 내 견해에 동조할 것이며 브라질 당국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건 그렇고, 칠레가 단기자본 유입에 대하여 추가적인 준비금 의무를 도입했을 때도 나는 소수의견 측에 속해 있었다. 대부분의 칠레 경제학자들은 시카고대학 출신으로서 반대의 입장에 섰다. 준비금 의무가 1990년대 칠레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었고 단기투기성 자금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공적인 정책결정이다. 왜냐하면 훗날 돈이 다시 빠져나가면 정부가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기자금 유입에 대한 모종의 억제조치는 나쁘지 않게 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방임과 통제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중국과 같이 자본계정을 완전 통제하지 아니하고 특정 형태의 자본유입에 대해서만 약간 통제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는 중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환율을 변동시키고 자본계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약 나에게 중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라고 한다면 한 번에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구분을 할 것이다. 정부는 FDI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해야 하며, 장기자금이 두 번째 선택이고, 단기자금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단기자금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가 불가능하며 다른 경제정책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는 완전개방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위치를 선택하겠다.

질문 G-20 정상회의와 G-8, G-2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람들은 G-20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G-8은 경제체제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 한다. G-20에 대한 견해와, 중국과 한국의 G-20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해 달라.

답변 G-8에서 G-20로 초점이 이동한 것과, G-8을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흥미로운 상황전개라고 생각한다. 나는 G-8의 마지막 멤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G-7을 선호하지만, G-7이나 G-8 모두가 퇴물이라 생각한다. 이들 나라는 세계경제를 대변할 정도로 세계 GDP에서의 충분한 비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G-20은 일종의 편의의 산물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편리한 대안이었다. 나쁘지 않은 조합이지만 경제력이나 경제정책의 수준 면에서 필수멤버가 되지 않아도 될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완벽한 그룹은 아니며, EU가 독자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늘 반대이다. G-19이 되어야 한다.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8이 지배하는 세계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G-8이 아닌 G-20 국

가들과 협상을 시도하였다. G-20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G-20 내에서도 각기 다른 연합 및 그룹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슈에 공동 대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이며, G-20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한다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하라운드를 보면 거의 사망 직전에 있다. 만약 한국이 중국, 브라질, 인도와 손잡고 개방이나 다자간 규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도하라운드의 비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국제무역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은 그리스 사태 이후 유로화의 가치나 재정문제에 골몰해 있고, 미국은 국내문제에 직결된 무역이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좋은 사례이다.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는 한국 때문이 아니다. 누가 G-20와 연계하여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을까? 토픽에 따라서 G-20의 하위그룹이 그 역할을 하리라 본다. 나는 현상유지 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질문 한국의 GDP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이유가 노동력 부족보다 국내투자 및 민간소비 부족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은퇴연령의 변경 등을 강조한 점은 한국이 당면한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답변 잠재성장률 계산은 자본, 노동, 기술의 세 가지를 기본요소로 하고 있는데, 귀하는 자본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나는 노동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고저축-고투자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경험적인 질문은 앞으로의 성장이 자본, 노동, 기술에서 각각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어 왔다는 점과 제조업부문보다는 서비스부문이 낮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다. 2020년, 2030년, 그리고 2040년의 노동력이 오늘날의 출산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율이 다소 낮다. 아직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 하나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또 하나 비교적 단순한 방안은 62세까지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예를 들자면 55세 은퇴연령을 금번 경제위기 이후 67세로 올렸다. 54세인 사람한테 갑자기 12년을 더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 엄청난 충격이다. 세계은행에서 나는 Gender Action Plan에 관련한 적이 있는데 여성인력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귀하는 자본에 중점을 둔 반면 나는 노동력에 중점을 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 견해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